

한농연의 1991년 지방선거 대응활동

* 창립 20주년,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난 한농연은 이제 21세기 우리 농업을 책임지는 핵심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업 개방과 환경 변화의 거센 도전을 당당히 헤쳐 나가는 핵심 농업세력이 되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생생한 교훈을 얻어 새로운 발전방향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에 “월간 한농연”은 “한농연 격동의 20년” 시리즈에 이어, “그 때를 아십니까” 란을 기획 연재합니다. 원로 회원분들께는 한농연의 힘찬 도약과 발전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고, 청장년 회원 여러분께는 한농연 조직과 우리 농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귀중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 편집자 주 -

1991년 이후 민선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는 6월에 실시되었습니다. 1991년 “30년만의 지방자치제 부활”이라면서 언론들은 연일 떠들썩했는데, 한농연은 설립 당시부터 지방자치제 실시에 있어서 회원들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및 지원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은 1990년과 91년의 지방자치제 교육이었습니다. 1차 교육은 1990년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2차 교육은 199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치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현안을 지역 주민들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선거전략이나 연설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있었지만, 강의의 대부분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해 및 정치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교육을 마친 농어민후계자들은 3월 26일 기초의원 선거 및 6월 20일 광역의원 선거에 적극 나섰고, 그 결과 기초의원 43명, 광역의원 4명의 당선자를 내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1991년의 지방선거 대응활동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행됐습니다. 3월 12일 후보자 등록마감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그간 문제가 되었던 생산자단체의 농수축협 등 협동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들의 피선거권 제한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농어민후계



자의 신분으로 조합장이나 지방의원 등으로 공직에 진출할 경우 작업장 이탈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결이었기에, 이후 한농연의 지방자치·농축협 진출 활동에 매우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후보등록 마감에 즈음해 판결이 이뤄짐으로써, 원칙적으로는 기초의원의 출마의 길이 트였다 할지라도 실제로 등록·출마하기는 불가능해진 회원들이 상당수 발생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광역선거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의 공천을 받은 농수축협 조합장 및 이감사 출신은 높은 당선율을 보였습니다(조합장 출신 59명, 이감사 출신 35명). 그러나 25명의 후보자를 낸 한농연은 이경해 2대 회장을 포함한 4명, 49명의 후보자를 낸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또한 임수진(현 한국농촌공사 사장)을 포함한 4명만이 당선되는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당시 여권 후보자의 금권·관권을 앞세운 물량공세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상주시장이 이정백씨는 당시 상주군 제1선거구의 광역의원 후보로 나섰습니다. 91년 6.20 지방선거에서 그는 3천만원이라는 최소의 비용만으로, 민자당 공천자와 최후까지 경합하다가 6백여표 차이로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이정백 시장의 당시 인터뷰를 보면 “하루 수억원씩 뿌려대는 돈 때문에 나중에는 내 선거운동원까지 돌아설 정도였다. 상대 후보의 금품살포와 교묘한 선거

운동 방해가 제일 큰 어려움이였다”고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품살포 공세에, 여당 후보에 비해 재력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한농연 회원 출신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또한 투표일과 선거운동기간이 한참 바쁠 모내기철에 겹치게 된 점도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마을 일을 도맡아 해야 할 청년층이었던 한농연 회원들은 선거운동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한농연 출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각 정당은 농어민 출신 후보자를 공천하기 보다는, 정치 경제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인과 사회단체 인사들을 대거 공천했습니다. 정당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 등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농어민 후보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선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뒤 한농연의 지방선거 대응활동은 점차 그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농연은 산하 전문기구로 지방자치제발전연구위원회(지발연)을 설치·운영하였으며, 1995년 6.27 지방선거에 대응하여 한시적 특별기구인 지자제공명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농연은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한 정책선거로 이끌고, 한농연 회원 출신 후보자의 조직적 진출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농민 중심의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출마후보자에 대한 지지·지원활동 ▲선거전략·전술의 제공 ▲타 농민단체와의 연대 ▲농어촌 내 깨끗한 공명선거 정착 ▲농어민에 대한 지자제 교양·교육 등을 목표로 활동했습니다.

한농연은 또한 통합선거법 개정안 중 시도의회 비례대표와 관련, 농민단체나 농업전문가의 비례대표 진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3명의 한농연 회원이 비례대표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통합선거법 87조에 의해 모든 단체가 적극적인 선거활동을 전개하지 못할 때, 한농연은 4월 18일 ‘정치진출 선언 및 지자제 농민연대 제안’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 참여를 공식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역사를 진전시키고자 할 때, 우리는 많은 노력과 대가를 치러야 했음을 한농연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당당한 지역농업의 주인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했던 선배 회원들의 열정과 땀 위에 오늘날 한농연의 위상을 높게 세울 수 있었음을 생각해 봅니다.